

# 野 반대·여론도 부정적인데...당정청, '통신비 2만원' 고수

### 與, 통신비 2만원 지원안 재논의 가능성 일축 靑, 적극 여론전 나서 무선통신, 방역 필수재 “4인 가족 8만원 통신비 절감 왜 무의미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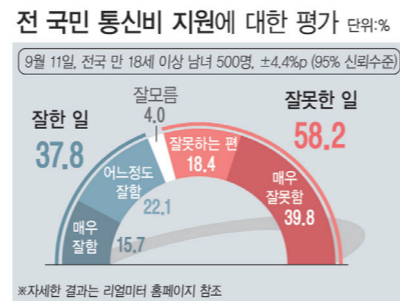
정부 여당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안이 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여당은 재논의 여지를 일축한 상황이다. 국회 추경안 심사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을 요청했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당정청은 아직까지 이를 고수한다는 기조다.

야권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요영 원내대표는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 재수가 한 해에만 106조원 급등한 상황에서 4차 추경 7조8000억원 중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통신비 2만원 보조에 쓴다는 게,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도 불리하다.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대한 부정 평가가 58.2%로 절반 이상이



였다. 긍정 평가는 37.8%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기존 결정에 변함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통신비 관련 논의를 일괄하지 않는 것으로서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여론 환기에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하고, 근무도 해야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

수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통신비 2만원 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특히 2만원이라는 액수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결국 통신사를 지원해주는 꼴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 통과하는 곳”이라며 “결국 국민의 세금에 그 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4명이면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 대안으로 국민의힘 주원내대표는 백신 무료 접종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국회에서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다”며

여지를 남기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통신비 2만원이든, 데이터 사용료 제공이든, 예방 접종이든,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된다”면서도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많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책무”라며 후속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번주에 4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 하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추석 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 시일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때 집행돼야 효과가 확실해 이번 주 내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은 생

각이 다른 듯하다”면서 “추석 뒤까지 심사할 수 있다고, 꼼꼼한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환자 목숨이 오늘 내일하는데 병원비 항목 보겠다고 수습을 미루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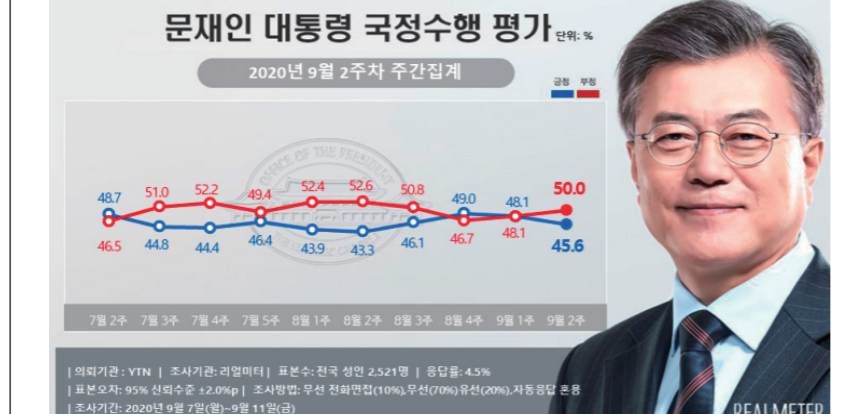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추석 전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의결 후 국무회의 의결부터 신청과 심사까지 행정적 실무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주에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를 다음 주까지 하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건 추석 전에 돈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심사) 일정을 다음 주까지 끌고 가자고 하면 못 받아들인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文대통령 지지율 45.6%...‘秋 아들 의혹’에 ‘이남자’ 하락

긍정 2.5%p 하락 45.6%...부정 1.9%p 상승 50%  
男 부정 4.9%p ↑·20대 0.2%p ↑...‘이·남자’ 부정多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소폭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상승,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3주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평가가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9월 2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p·응답

률 4.5%)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5.6%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평가를 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지난 주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50.0%(매우 잘못 35.3%·잘못하는 편 14.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감소한 4.3%로 조사됐다.

긍정평가는 지난 주 같은 조사 대비 2.5%포인트 떨어져 2주 연속 하락세의 흐름을 보였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올라 부정평가가 더 앞서는 ‘데드 크로스’에 진입했다.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평가가 앞선 것은 3주만이다.

추미에 국방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보도들이 확산된 것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남자 계층에서 부정평가가 비율이 지난 주 대비 소폭 상승한 경향성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3.4%p ↓·긍정 48.8%→42.2%) ▲60대(3.2%p ↓·긍정 42.5%→39.3%) ▲40대(3.2%p ↓·긍정 61.3%→58.1%) ▲18~29세(2.4%p ↓·긍정 39%→36.6%)에서 하락세를 이끌었다. 성별로는 남성(6.6%p ↓·긍정 48.8%→42.2%)이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여성(1.6%p ↑·긍정 47.5% → 49.1%)은 소폭 올랐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9%p ↓·긍정 43.7%→37.8%) ▲대구·경북(5.0%p ↓·긍정 38.4%→33.4%)에서는 하락한 반면, 대전·세종·충청(6.5%p ↑·긍정 42.6%→49.1%)에서는 올랐다.

## 김종인-안철수, 대어 공세 ‘한목소리’...거리 좁히나

“법무장관, 불공정 바이러스 전파”  
“국민 무시위 않는 괴물정권 변질”  
“국민들 공정 묻는데 신파로 대답”  
“추미에 뻔뻔함, 문대통령 뒷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전파자”라며 추 장관을 강력 비난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 같다. 코로나와 불공정 바이러스”라며 “전 법무부 장관은 교육, 현 법무부 장관은 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단독법, 공명 운운하며 ‘엄마천스’ 황제 군 휴가 (내용을 폭로한) 청년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다. 사태 해결은커녕 상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공정의 사

전적 정도의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다.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되며 국민을 무시위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법무장관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전날 유감 표명에 대해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매고 있는데 장관은 한가하게 SNS에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다”며 “국민들

은 공정과 정의의 물레, 왜 추 장관은 신파로 동문서답하냐”라고 쏘아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추 장관의 이런 뻔뻔함은 대통령의 뒷배 때문인가”라며 “추 장관은 대통령 ‘뺨’으로 버티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안 대표는 “조국과 추미애가 아니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소위 검찰개혁을 할 사람이 정권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며 “국민들의 희망과 믿음을 뺏은 정권, 국민 화병 돌우는 대통령과 장관이 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